

東亞日報

106 since 1920

1920년 4월 1일 창간 제32712호 40판 안내 02-2020-0114 구독·배달 1588-2020

단기 4359년 음력 10월 10일 丙申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이틀 짜낸 AI 커닝 대책 "단추에 스티커 부착"

수능 '부정행위 차단' 총리 담화문
감독인력 등 8400명 추가 배치
매 교시 스마트안경 여부 검사
부정 적발땐 10년간 응시 박탈
李, 해외 순방중 화상 점검회의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해 수험생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한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정부가 19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커닝을 막기 위해서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반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선진국으로 꼽히는 한국에서 사전에 기술적인 예방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아날로그식 대응 방안을 총동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뒤 수험생 불안이 커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에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검사를 받고 이어 매 교시 안경을 쓴 상태에서 점검받아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 이용을 막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양쪽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수험생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제출하지 않고 숨겨둔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에 수신 거부나 무음 처리가 불가능한 위급 재난 문자도 발송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7만5000명의 감독관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이 추가 배치된다.

사후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와 여당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당장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재학 중인 수험생은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고,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사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A3면에 관련기사

김정은 방중 가능성에 트럼프 "그도 원할 것"

APEC 하루 앞두고 북미회담 띄워
푸틴도 "김정은 中오면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He would like to)"이라고 밝혔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아시아 순방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어디에서 만나느냐'는 질문엔 "중국에서"라며 "김정은이 (중국에) 올 수 있다. 그건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렸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와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참석차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 재개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열어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6일 APEC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김 위원장이 APEC에 온다면,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미-중-러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최측근인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났다.

김 위원장은 15~16일 북-중 접경지역인 백두산 동남쪽 기슭 삼지연시 관광지구 일대를 방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A2면에 계속

韓, 세계 4번째 年수출 1조달러… 日도 못 세운 기록

첫수출 78년만에 獨美中 이어 달성
AI 바람 타고 수출 사상최대로
"반도체 영향 절대적, 낙관은 안돼"

한국이 이르면 19일 오후 '수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 성과다.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없이 1948년 첫 공식 수출에 나선 지 78년 만에 세계 수출 4강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이 44억600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누적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는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오랫동안 아시아를 대표한 제조업 강국 일본도 밟아보지 못했다. 네덜란드가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만, 수입품을 다시 내다 파는 재수출 비중이 높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한국이 1948년 첫 수출길을 연 뒤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6년 뒤인 1964년이었다.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조 달러까지 넘어서면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다. 이번 성과는 세계 각국이 무역의 문을 넓히기는커녕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거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커졌다. 그럼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끌어올렸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 것은 세계 경제 역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수출 급증은 반도체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1조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낙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soon9@donga.com·이상환 기자

▶A6면에 계속, A8면에 관련기사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200일 수사

李대통령 재가 즉시 공포-시행
수사 대상 17건중 李 기소 8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법은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이 19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공포 시한은 21일까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인 조작기소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총 17건의 수사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 중 8건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사건이다.

특검법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공복(公僕)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共犯)의 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훈상·소설희 기자

▶A4면에 계속

